



2000년대를 향한

養 豚 政 策 方 向



許 信 行

農村經濟研究院 · 研究委員

● 농촌경제의 현실은 매우 어려운상태 ●

최근의 양돈불황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가격변동의 일환으로서 일찍부터 예상되었던 것이지만, 우리 농촌사회에 전례가 없는 충격과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더우기 돼지값 폭락이 언론과 정치사회에까지 파급되어, 이것이 마치 농촌문제의 상징처럼 화석화된 느낌마저 없지 않았다. 80년 6월 이후 32개월의 주기변동을 벗어나 3년에 걸친 오랜 호황을 맞이했었는데도, 왜 이번의 가격하락이 그토록 깊은 상처를 남겼을까?

지난 가을에 추곡 수매가격이 동결되었고, 채소와 과일류의 가격도 저조한 수준이었으며, 도입 옥수수 가격의 상승에 따른 배합사료가격의 앙등으로 농촌경제의 현실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축산물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진데다 양돈불황까지 겹치게 되었다. 구입사료의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는데도 돼지가격은 반대로 떨어짐으로써 영세규모의 부업양돈 농가가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많은 부업양돈 농가가 양돈업계에서 탈락하는 쓰라린 진통을 겪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대규모 기업양돈가들이 풍부한 자금력을 뒷받침으로 하여 부업양돈가의 설자리마저 빼앗아 가게 되었으니 가난한 대다수의 부업양돈가들이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지 않은가.

● 돼지가격폭락이 가난한 사람에게서는 생존의 문제 ●

같은 손해를 입어도 가난한 사람의 입장과 부유한 사람의 입장은 다르다. 돼지가격 폭락이 부유한 사람에게서는 값진 경험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가난한 사람에게서는 생존의 문제에 해당된다. 돼지 몇마리의 사육에 농가소득원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소규모 부업양돈가들이 이번의 불황으로 탈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수효가 적지 않다면, 분명히 여기에는 경제문제와 더불어 사회적인 문제까지를 안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 양돈불황을 지켜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부로 느낀 생각이 있었다면, 그것은 아마도 돼지가격의 폭락이 앞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이었을 것이다. 가격폭락이 양돈농가의 일시적인 사육두수 감축에 의하여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소규모 부업양돈농가의 탈락이라는 극한적인 상황에 의해서 회복되고 있다는 값비싼 댓가 때문이다. 또 양돈업계가 불황에서 호황으로 전환할 때 그동안 어미돼지를 보유하고 있던 대규모 전 기업양돈가들이 새끼

돼지를 높은 가격으로 부업양돈가들에게 판매함으로써 형평의 원칙이 깨진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런 현상은 우리가 지난 20여년간 수차례 경험한바 있던 모순의 악순환에 해당되는 것이다.

● 2000년대 국민 1인당 돼지고기소비량 12kg, 총소비량61만M/T 예상 ●

앞으로 2000년대를 향해서 내다볼 때, 우리 국민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이 현재의 6kg에서 12kg으로 늘어날 전망이고, 여기에 인구증가 요인까지를 합하면 돼지고기 총소비량은 현재 25만M/T에서 61만M/T 가까이 증가될 전망이다. 한편 생산 측면에서는 50만 사육농가의 수효가 크게 늘어나지 않겠지만, 돼지사육이 중요한 농가소득원으로서 부각되리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농가호당 평균 돼지사육두수가 많아지게 될 것이고, 양돈에 의한 소득이 이들 농가의 생사문제(生死問題)와 직결된다. 이런 판국에 양돈업체가 업치락 하는 가격의 주기변동이라든가 불황 같은 것을 용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 전문기구육성·제도적보장등의 수급조절장치 마련해야 ●

그래서 2000년대를 향한 양돈산업의 정책방향은 어떻게 하든지 돼지가격의 안정에 모아져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책당국이 농민과 일반 사회인들의 지탄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그런데 돼지가격을 항구적으로 안정시키려면 수급의 조절장치가 없이는 안될 것이다. 수급의 조절장치란 행정상의 응급조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전문기구를 육성하고, 이 기구로 하여금 수급조절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장이 있어야 한다.

양돈산업의 안정을 위한 전문기구는 우선 생산조절에 힘써야 한다. 양돈업체의 불황은 근본적으로 과잉생산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전체 생산규모를 조절하지 않고서는 양돈산업의 안정, 즉 돼지가격을 안정시킬 수가 없다. 따라서 양돈농가의 등록제를 실시, 전문기구가 개별농가의 사육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강제적인 규제까지 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 출하조정 장치도 강구해야 ●

생산조절에 이어 돼지의 출하조정장치도 강구해야 한다. 돼지가격의 일시적인 불안정은 출하조정에 의해서 극복될 수 있다. 돼지의 출하조정은 지역별 농가별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일을 가능케 하려면 전담기구의 전산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전담기구는 돼지의 수매비축과 가공 및 수출까지도 전문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돼지고기의 소비촉진은 물론 필요할 경우 소비억제까지도 의도대로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면 문제는 이 전담기구를 어느 기관, 또는 단체가 맡을 것이냐 하는 데에 있다. 전국적인 양돈업협동조합을 육성하거나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돼지유통위원회(Hog Marketing Board) 같은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 물론 축협중앙회가 이런 성격의 기구를 독자적으로 육성하여 떠 맡거나 또는 양돈협회 같은 기구를 확대 개편하여 대체시키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기구의 독자성과 전문성 그리고 실력을 갖춘 효율적인 운영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